

경남도 토종작물 800여종 구경 오세요

테마전시포 개방,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구경하고 무료로 종자도 받고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농자원')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2025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자원 자체 농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과 품종개량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가치와 우수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토종·테마전시포는 식물에

따라 토종작물 전시포(35종), 약용작물 전시포(163종), 토종 수집작물 갱신포(438종), 무상분양 증식포(16종), 비교전시포(86종), 벼 아트포, 식물원, 종자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관람·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국수호박 등 다양한 박과작물로 조성한 박과터널을 비롯하여 옥수수밭 미로 체험, 고무마·옥수수 수확 체험, 포도

존, 바람개비, 원두막, 코스모스길 등의 즐길 거리도 마련하였다. 330㎡ 규모의 식물원에는 토종식물, 허브류 등 80여종의 식물이 전시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주까리공, 녹두 등 15종의 토종종자 무료나눔도 진행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성 위주의 농업경영으로 토종작물의 경작이 축소되고 이제는 거의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토종작물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주권과 품종별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도는 토종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토종자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종작물의 중요성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테마별로 작물을 재배하여 15년째 개방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개방한다.

최성룡 기자

5천억 규모 산업단지·유휴부지 태양광사업 협약

산업·농공단지 유휴공간 활용 300MW 태양광 발전사업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4일 BNK자산운용(주), (주)에코프로파트너스, 넥스트에스(주), 경북농공단지협회의와 함께 '산업단지 및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성경식 BNK자산운용(주) 대표, 방정식 (주)에코프로파트너스 고문, 손경익 넥스트에스(주) 대표, 김형구 경북농공단지협회의 회장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차장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0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0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총 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입주기업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임대료, 발전세의 부담, REC 판매 등 추가 수익과 더불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BNK자산운용,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친환경사업 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및 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넥스트에스는 설계·시공·운



영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 수행한다. 경북농공단지협회의는 회원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고, 경상북도는 관계기관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다식 축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협력 구조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는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그 비전을 더 구체화하며, 경상북도와 기업, 산업·농공단지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정부와 세계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북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대상자 3명 선정

부산시 3단계 심사를 거쳐 김진주 씨, 양승민 씨, 김현준 씨 최종 선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이 글로벌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부산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리더(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개인별 최대 1억 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하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청년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래신산업 분야를 신설하여 더욱 폭넓은 분야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해보다 50명이 증가(71%)한 총 120명의 청년이 신청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특히, 케이티앤지(KT&G)의 협조로 '상상마당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3차 공개심사에서는 전문가(6명)뿐 아니라 부산시민 평가단(24명)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은 ▲김진주 씨(혁신리더 분야,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양승민 씨(문화예술 분야, 글로벌 공연 프로듀서) ▲김현준 씨(미래신산업 분야,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다.

선정된 3명의 청년에게는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 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1차 연도 2천만 원, 2차 연도 5천만 원, 3차 연도 3천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김귀우 국장은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을 통해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동구-울주군,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지정 신청서 제출...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울산시가 대표 해양 관광지인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과 산악 명소 영남알프스 일대에 대한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울산시와 동구, 울주군은 지난 8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시는 2023년 3월부터 동구-울주군 상북면·삼남읍 영남알프스 일대 약 96.2㎢ 등 총 97.9㎢ 규모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추진된다.

공회회, 시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밟으며 지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지정 계획안에 따르면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대상지는 동구 일산동·방어동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 일대 약 1.7㎢와 울주군 상북면·삼남읍 영남알프스 일대 약 96.2㎢ 등 총 97.9㎢ 규모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 6개 특화사업, 21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과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대에는 해양·산악레저 스포츠 거점 공간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상표화·홍보(브랜딩·마케팅)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레저·스포츠·문화·산업'이 융합된 체류형 복합관광 도시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의견수렴과 현

지 실사를 진행한 뒤, 지역 특성 적합성·규제특례와 특화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이후 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울주 연안·봉계 한우불고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 중구 태화역사문화 등 3개 지역 특화발전특구를 운영 중이다. 이번 해양산악레저특구가 지정되면 4번째 특구가 된다.

시 관계자는 "현지 실사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정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

대구시 시민 중심 '선제적 주민참여형 대피체계' 운영

광역 단위 최초 '주민참여형 산사태 대피체계' 통해 주민대피율 제고



대구광역시시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 광역 단위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제적 산사태 대피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대구시는 지난 8월 4일, 실제 대피에 참여했던 달성군 구지면 등 6개 읍·면 이상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야간·새벽시간대 대피의 어려움 ▲지급된 구호물품 내용물 및 배부 지연 불만

▲먹거리 및 잠자리 불편 등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일몰전 사전대피 ▲고령층 선호 구호품 지급(간편 식음료 등) ▲재난대응 생활품 지원 ▲대피 조력자 수당 지급 ▲고령층 대피를 감안한 프로그램 도입(산림재난교육, 치매 예방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이 제안됐다.

먼저, 산사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동시에,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구성된 '대구시 재난안전기동대'를 중심으로 구·군·읍·면·동 직원들이 협력해 선호 구호품 및 생활품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 대피 도우미, 대피소 안전 지킴이, 산사태 우려지역 순찰대

역할 등을 수행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대피소 주민을 대상으로 산물·산사태 등 산림재난 영상 교육과 전문 상담가의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소극적인 대피 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관(官) 주도의 소극적인 주민 대피 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피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불협화를 줄이고 '안전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잡아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윤석 기자

3무 회의 도입 2년, 실질행정 자리잡아

의령군이 격주로 운영하는 '3무(無) 간부회의'가 도입 2년 만에 조직 문화 속에 정착했다.

문서·보고·자리를 없앤 파격적 회의 방식이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내부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2년 전 "앞으로 간부회의는 ▲노(No)폐이피 ▲노(No)보고 ▲노(No)자리가 돼야 한다. 첫 번째 형식적인 문서가 없는 회의, 두 번째 순서대로 발표하는 보고와 일방적인 지시가 없는 회의, 세 번째 정해진 자리가 없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부서장 대신 실무 담당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3무 간부회의'는 정형화되고, 수직적인 회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

문성과 역량이 집약된 현실성 있는 업무 공유와 주제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간부회의에서는 회의 좌석 배치가 새롭게 됐다.

오태완 군수가 상석에서 회의를 단독으로 주재했던 방식을 탈피해 부군수와 안전건설국장이 양옆에 앉았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 대신 감사팀장, 건설교통과장 대신 농업기반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간부회의에 통상 참석하지 않는 읍면장 중 의령읍장이 참석했다. 최용석 읍장은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도 형식적인 문서나

보고 순서는 없었으며, 통계 기반 주제 토론이 중심이 됐다.

의령군의 높은 '빈집율'을 주제로 부서 간 토론이 진행됐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 운영,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등 실현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며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수해 복구와 관련된 토론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기존 개선과 DB 구축을 통한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타부서장의 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가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건설적인 논의가 오갔다.

오태완 군수는 "실무 중심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울산시, 신축 매입약정형 공공주택 추가 공모 실시해

울산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미진정 물량 152호에 대한 추가공모를 실시한다.

매입 대상은 청년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24~26㎡ 규모의 다세대·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울산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들의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사업자

가 매입약정신청서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울산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공모 신청과 관련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전검토 기간을 운영, 접수 서류 누락 여부와 작성 적정성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을 대상으로 매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확정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도교통부와 협력해 2024년부터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라며 "이번 추가공모 물량 확보를 통해 청년 주거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 약정을 맺고 건축을 완료하면 울산시가 이를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설계·시

공 기준을 제시해 입주 수요에 맞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민간 건설 참여를 통해 행정 절차도 단축돼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4일 강릉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2리터 생수 4만 8,000병을 긴급 지원했다.

이호근 기자